

안전관리 <재해손실이 건설경영에 미치는 영향>

박재영 / (주)한진중공업 건설부문 대표이사

1. 건설안전관리의 대상 및 목적



모든 건설목적물은 필요목적에 따라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및 해체의 순환을 주기로 반복되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과 소멸의 경제적인 순환과 국민의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구축물 LIFE-CYCLE의 각 단계에서 경제적인 비용의 관리를 요구하는 요소중 공사내역상의 직접비는 눈에 보이는 대상으로 경영자의 눈에서 항시 이해되고 관리되지만, 숨은 손실비(hidden cost of loss)는 관심있는 관리자에게만 중요요소로 인식되고 있을 뿐입니다. 현장에서의 안전사고(재해) 발생은 관리수준 정도에 따라 결과가 비례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소홀히 인식되어져 왔습니다.

건설공사는 사업의 특수성때문에 늘 많은 재해의 잠재요인이 있고 관리상태가 허술해도 요행히 재해없이 공사를 종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재해예방의 원칙 중 손실우연의 원칙이 예외적으로 적용된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사고의 결과는 시간적, 장소적 대상조건에 따라 우연성에 의해 재해의 크기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이며, 300회의 무상해사고(앗차! 사고: near accident)는 중상해 재해발생의 예비경고임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잠재위험요인 제거에 시공사와 협력업체 모두가 전심전력으로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재해조사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안전관리의 주요대상은 발생재해에 대한 대책수립도 매우 중요하지만 무수히 반복 발생하고 있는 앗차! 사고에 대한 관리(死角 없는 대책)입니다.

앗차! 사고의 발굴과 재해예방대책수립 그리고 신속한 조치만이 재해예방의 올바른 방법일 것입니다. 가설

공사에서부터 마감공정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공종 단계별 안전성평가를 통하여 앗차사고등 재해유발요인의 제거를 위한 안전활동을 일상화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홍익인간 이념을 바탕으로 인간존중 실현에 있으며 최고경영자의 안전경영의지가 확신을 가질 때 그 기업의 무사고 달성의 기반은 다져질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이미지의 개선을 획득 할 수 있으며 이는 근본적인 인간존중, 인명중시라는 기업경영 이념이 인도주의 정신의 진솔한 발로에 의해 개선되고 실천될 때 이루어집니다.

2. 건설재해 및 손실비용과

주요 국가간의 산업재해 비교

2.1 우리건설업의 재해현황과 손실비용

우리나라 건설업계의 2000년도 1년간의 재해발생 현황을 짚어본다면 연간 총 매출실적이 69조1,300억원, 건설근로자수 160만명, 재해자수 13,500명, 사망자수 614명, 800대 건설업체 평균재해율 0.53%를 기록하였으며, 총 경제적 손실액은 1조5,210억원(전 산업 8조7천억원)이며, 이것은 매출실적대비 2.2%의 경제적 손실로 2000년 매출영업 이익율 4.0%와 비교한다면 이익의 55%나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기업에서 안전관리를 최우선의 경영목표로 삼아 산업재해를 줄이면 결국, 기업이윤은 극대화를 달성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일일단위로 산정한다면 매일 재해자 37명과 사망자 1.7명이 발생하며, 손실비용으로는 매일 42억원의 지출하지 않아도 될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수치는 재무구조를 어렵게하고 경쟁력을 상실하게 하는 주요 요소로서 건설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표 2-1. 손실 비교표

구 분	금 액	2000년도 매출액대비 (69조 1,300억원)	비 고
경제적손실	1조 5,210억원	2.2%	직접손실액 3,042억원
매출영업이익	2조 7,652억원	4.0%	대한건설협회 2000년 건설업 경영분석 근거에 의함
경제적손실대비 매출영업이익	1조 2,442억원	1.8%	매출영업이익의 55%손실점유

- 1) 경제적손실액 (직접 : 간접 = 1 : 4)
3,042억원(직접손실액) + 1조 2,168억원(간접손실액)
= 1조 5,210억원
- 2) 근로자 1인당 매출액
69조 1,300억원(매출실적) / 160만명(건설근로자수)
= 4,320만원
- 3) 재해자 1인당 손실액
1조 5,210억원(경제적손실액) / 13,500명(재해자수)
= 1억1천2백만원
- 4) 매출실적 대비 안전관리 미비로 인한 경제적 손실율
1조 5,210억원(경제적손실액) /
69조 1,300억원(매출실적) * 100 = 2.2%
- 5) 매출 영업이익율 대비 안전관리 미비로 인한 경제적 손실율
2.2% / 4.0%(매출영업이익율) * 100 = 55%

- 1) 재해통계의 기준이 국가별로 상이하어 단순비교는 곤란한 점이 있으나 재해범위대상수준이 우리보다는 높게 설정되어 있어 한국방식을 적용 직접비교 하였음.(한국산업안전공단자료 인용)
- 2) 재해율(전산업) : 재해자수/근로자수×100
- 3) 사망만인율(전산업) : 사망자수/근로자수×10,000

재해율은 일본, 영국의 1.5배, 사망만인율은 5.9배 높게 나타났음

2.2 주요선진국과의 산업재해통계비교
(국내자료중심 : 전산업)

3. 재해손실이 건설경영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윤추구에 있으며 이에 상반되는 재해손실에 대하여 미국의 보험학자 버드(Bird)의 빙산의 일각을 예로 들어도 직접손실액에 대한 간접손실액 비율이 1:5이지만 실제 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그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표 2-2. 산업재해통계 비교표

구 분 (전산업)	한 국 ('2000)	일 본 ('2000)	독 일 ('98)	미 국 (2000)	싱가폴 ('2000)	영 국 ('98/' 00)
근로자수(천명)	9,486	53,560	37,587	110,065	684	24,572
재해자수(명)	63,989	124,023	1,584,077	2,587,000	3,519	146,942
재해율(%)	0.67	0.23	4.21	2.35		0.60
사망자수(명)	1,573	1,889	1,287	4,160	74	160
사망만인율(%)	1.66	0.35	0.34	0.36		0.07
기준(기간)	요양4일이상	휴업4일이상	휴업3일초과	휴업1일이상	휴업3일초과	휴업3일초과

- 1) 안전관리 불량 기업에 대한 입찰참가사전심사(P.Q)에서 제한되며,
- 2) 재해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보상비 증대로 기업의 산재보험료가 증가되고,
- 3) 재해자 손실에 따른 제품이나 공사비 등의 생산 원가가 높아져 결국 국민생활부담이 늘어난다.
- 4) 인적,물적인 손실에 따른 교통두절, 정전, 가스공급중단, 단수 등 기업은 물론 국민의 일상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 5) 재해 빈도가 많은 기업일수록 재해에 대한 불안감으로 정신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 6) 정부관계자, 감리자, 발주처등에 대한 기업 신뢰도 저하로 건설수주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 7) 결과적으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기업이미지 저하는 기업의 생산품에 대한 매출저하로 연결되어 이윤추구를 경영의 목표로 삼는 기업에는 크나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재해의 경제적 손실은 전술한 바와 같이 경영수익의 55%이상을 잠식할 정도로 심각한 것이 우리나라 건설경영의 현실입니다.

기업은 재해손실 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재해예방활동과 개선을 위한 시기를 늦추어서는 안됩니다. 바로 지금이 실천할 때입니다.

4. 건설재해예방의 대책

4.1 재해예방대책은 전원참여와

공동의 책임인식이 중요

재해손실비용 지출부담이 상기의 비교치만큼 건설경영의 부담(불이익 : demerit)으로 작용되고 있음은 국가경쟁력에서도 현저한 격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정부, 학계, 연구기관, 기업, 재해예방전문기관 등 우리 모두의 과제이며, 건설경영의 가장 주요문제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정부의 기업활동규제완화조치의 목적하는 바가 진정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한 조치였다면 다시 한번 꼼꼼히 짚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전은 보다 더 기반을 강화해야 할 주요 대상이며 경제논리우선의 희생양이 아닙니다.

안전교육, 안전관리자 선임규모의 확대 등 안전관련 행정규제의 완화는 건설안전관리에 보탬이 된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안전교육과 확인점검업무 등은 정부기관에서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으로 점차 이양함으로써 전문기관을 더

욱 체계적으로 양성화시킬 수 있고, 부족한 행정인력 부족으로 인한 재해예방업무의 공백을 메워 안전정책 구현의 효용성을 높혀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법 준수 비용이 법 위반시보다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수단임을 일깨울 수 있도록 법 집행의 강한 의지를 유감없이 보여야 하며 불합리한 제도는 단순화 일원화하여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건설사업계획 입안 및 발주자는 계획단계에서 시공 및 유지관리차원의 단계까지 근로자의 안전과 이용자의 편익을 고려하는 세심한 배려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은 국민에 대한 안전기술 서비스 기관의 요람으로써 안전문화 정착 및 수준향상에 목표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건설 시공사는 원가관리 개념에서 안전확보 우선의 안전경영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OECD 회원국중 가장 높은 재해율은 우리를 항시 후진국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오명의 자리에서 안전선진국 대열에 합류하여야 합니다. 우수한 품질은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에서 양산되어지며 불량 생산품은 냉정한 무한경쟁의 세계시장에서 외면당할 수밖에 없음을 절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경영이 어려워 호전된 후에 안전에 치중한다는 것은 사후 약방문에 불과합니다. 눈앞의 성과에 급급하여 숲을 보지 못하는 누를 더 이상 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제는 생산 따로, 안전 따로(production and safety)가 아닌 생산과 안전(production with safety)이라는 안전의식과 전원참여하고 재해의 책임은 이해관계자 모두가 자기자신이라는 자세로 경영되어야 합니다.

4.2 재해예방은 협력업체와 함께 하여야 합니다

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늘 불안정한 근로환경을 접하고 있는 협력업체는 구조적으로 취약 바로 그 자체입니다.

I.M.F이후 더욱 어려워진 수주경쟁은 더 물러설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낮은 임금의 기능공을 찾게 되고 자체적인 안전활동은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협력업체는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고 소속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물론, 원청사의 안전시설 설치 및 보호구지급·교육지원과 안전시공방법에 대한 기술지원이 병행되어야 하며, 상호합동으로 사업장의 안전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점검과 협의를 통하여 인식을 같이할 때 재해예방의 목표는 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재해예방위원회의 결성과 자발적인 안전활동의

전개는 근로자에게 신뢰를 갖게 하고, 안전의식을 일깨워 주므로써 자율적인 안전경영 시스템의 목적하는 바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경영의 목적이 근로자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이라면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장환경조성은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한 경영자의 기본적인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부적절한 작업환경 및 생산원가의 부담이 근로자에게 전가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유는 재해손실의 부담이 순환되어 결국은 우리자신의 경영의 부담으로 되돌아 올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원청사와 협력업체는 경영의 파트너쉽으로 상생의 공동체로서 책임을 다할 때 안전한 건설환경이 조성되며 경쟁력이 강화되고 근로자 의식속에 서서히 안전문화가 뿌리내림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경영에 품질, 공정, 이윤 3대 원칙을 적용하지만 이제부터는 인간존중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해예방 4대 원칙에 적용하여 재해는 꼭 예방 될 수 있다는 확신에 찬 자세로 기업경영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 역시 사람이 근본이기 때문에 사람 즉 인간중시 차원의 안전경영이야말로 기업경영의 근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전경영의 이념에서 출발하여야 최상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고 공사목적물의 납기를 단축할 수 있으며, 이윤도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호에는 건설안전관리기법중 안전기술공법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합니다.

5. 결론

5.1 건설재해예방의 새로운 전환기를 마련해야 할 때

이제 재대형 건설재해는 꼭 근절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 하반기 이후 악화되어 온 건설경기는 2001년 8월을 저점으로 회복되고 있으며 건설경기 회복이 대형기업, 서울지역 기업들에 의해 주도되다가 최근 들어서는 중소기업 및 지방 건설업체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2년 2월 건설업 체감경기지수(BSI) 전망지수는 정부의 시설공사 조기발주와 건설경기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건비 및 자재비용 상승 등 불안한 요인의 잠재에도 불구하고 126.2를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별, 규모별 차이가 없이 대부분 120~130의 높은 전망지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방(126.2)과 대형업체(131.6)의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2년 2월현재 건설업 중소기업 현장의 재해발생율이 전년대비 48%이상 증가하고 사망률 또한 36%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양적 성장의 이면에서 많은 재해와 부실이 비례적으로 양산된다면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는 경영부실과 사회적RISK로 남게 될 것입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일과성의 재해예방대책으로는 좀처럼 치유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안전불감증이 사회일각의 보편적인 정서로 남아있게 해서는 안됩니다. 한시바삐 효율적인 제도의 정비와 성실하게 역할분담을 실천해야 할 때 라고 생각합니다.